

# 유명무실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삼표산업 즉각 기소하고 엄정처벌하라!"

✎ 김준 기자 | © 승인 2022.08.24 18: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삼표산업  
"증거인멸 정황에도 시간 끄는 검찰"  
민주노총, "직접 고발장 제출하겠다"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인천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삼표산업 기소에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삼표산업의 기소를 촉구하며 의정부지검을 규탄했다.

지난 1월 설연휴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결과 사고 나흘 전부터 직원이 붕괴 위험을 알렸던 것이 드러났고, 사고 뒤에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현장소장에게 붕괴원인을 "날씨 탓으로 돌리자"는 통화와 함께 직원들의 진술방향을 교육하라고 지시 한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슬러지가 원인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후 또다시 "다른 제품용 토사를 쌓아뒀서라고 하자", "쌓아둔 기간은 절반으로 말하자" 지시하는 등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났다.

또한 삼표산업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2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이종신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이 대표는 잠금을 풀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삼표산업이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전산 자료를 다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 중에 삼표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고 이후 전면중지된 작업 중지를 부분 해지해달라 두 차례 신청해 후안무치한 태도로 지탄받기도 했다.

이후 사고 5개월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이종신 대표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송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정부지검은 시간을 끌며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자, 민주노총과 민변이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가 조사를 미적거리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도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뛰어 죽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의 보건위원장은 "검찰이 2개월 전에 일반인의 서명을 통해서 촉구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규탄하며 "검찰은 정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삼표산업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이종신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고발인의 자격으로 수사 과정에 참여할 것이고 그래서 이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참여해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제정된 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마치 입법기관인 것처럼, 아니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부진한 검찰의 대응을 규탄했다. "이러다 보니까 수사는 하는 것 같은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굉장히 웃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기소를 해야 될 기관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관임을 이런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 확인시켜야 한다"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 적용 대상 사고 건수가 100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14건에 불과하며 그중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 중대죄 처벌법 적용에 대한 수사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며 법 집행기관으로 더 이상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삼표산업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 수석본부장은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고용노동부조차도 삼표산업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자그마치 60건이 사법 조치가 되고 39건이 과태료 8천만 원을 받았고 전체 103건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삼표산업은 사실 작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다"고 삼표산업의 실태를 고발했다.

한규협 수석본부장은 "구속을 촉구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도 참 슬프다. 검찰은 엄연한 사법체계의 독립적인 기관임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 삼표그룹의 최고경영자 정도원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이 사부산업 사고 지역의 당사자로서 이 투쟁이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계속해서 투쟁하겠다" 결의를 다졌다.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 뜻을 밝히며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의정부지검을 규탄한다 ▲의정부지검은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처벌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중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24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 기자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